국토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관리"

내년 3월 15일까지 전국 국도 · 고속도로 전구간 '제설대책기간' 설정

신속 제설대응 체계 유지… 김윤덕 장관 "도로 안전문화 확산 큰 기여"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도내는 물론 전국 국도와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과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대책기간 동안 국토부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제설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설에 대비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를 확보했으며 제설장비 약 8100대와 제설인력 560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대설이 자주 발생하는 고속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 257곳에는 강설 예보 시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을 사전 투입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를 비롯해 전국 449개 제설창고와 1538개의 자동염수분사시설도 구축해 원거리 지역 제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설함 7444개도 주요 도로변에 비치된다.

도로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는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하고, 도로전광표지(VMS)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로살얼음 무조건 주의', '눈 오면 무조건 감속' 등 명확한 안전 문구를 통해 겨울철 교통안전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티맵(T-map)·카카오내비 등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협업해 실시간 도로결빙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말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고속·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폭설 대응 모의훈련과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제설대책은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겨울철 도로 안전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 규정

민주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4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기후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중간 감축목표 부재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있으나,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단계별 감축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두고 "국가의 감축 의무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과소보호 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안을 의결하면서 법률상 목표 정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국가의 중기 목표 부재는 실질적 이행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2030년까지 35% 이상 △2035년까지 55% 이상 △2040년까지 70% 이상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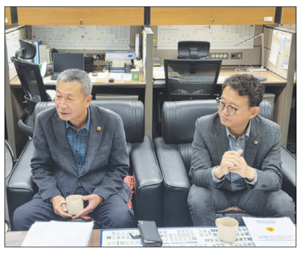
아울러 연도별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도록 해 특정 시점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함께 담았다. 이는 감축 의무가 2040년대 후반에 급격히 몰리는 상황을 방지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취지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소리축제 조직위 운영 전반 '정조준' 예고

"사유화 의혹 · 수도권 편중 예산 집행"

도의회 문안위 "행감서 철저히 따지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먼저 축제조직위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정관상 상임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상임위원은 5명에 불과하고, 선출직 부위원장도 지난해 사임 이후 보선 없이 공석인 상태다.

의원들은 "축소된 의사결정 체계로 인해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우려했다.

집행위원장의 겸직 및 예산 집행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감독을 겸직하면서 축제조직위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 자격 수상임에도 조직위 업무추진비로 축하 화환을 보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축제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축제 개막공연 초대권 비율이 2023년 71.9%, 2024년에는 84.5%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배포되었으며, 배포 기준이나 관련 규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초대권이 수도권 인사들에게 대량 배포된 사례도 확인됐다.

소리축제열차 운영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의 가족이 행사열차에 동반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조직위의 해명은 "전문적 역할 수행" 또는 "행사 운영 차원"이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축제 개막작 연출자 선정 과정에서는 조직위원장의 여동생이 선임되었음에도 회의록 등 절차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올해 소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전통분야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음에도, 사업 인력과 용역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업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용역비 상당량이 수도권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으며, 도비 매칭 예산 역시 대부분 서울 소재 업체에 사용됐다.

수의계약 건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23년 42건, 2024년 30건에서 2025년에는 61건으로 확대되었고, 3,000만원 이상 계약 중 5건이 서울·경기 소재 업체로 확인되는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문화 향유 확대"를 약속했던 '찾아가는 소리축제'가 올해 단 5곳에서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축제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운영"이라고 평가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도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신뢰를 회복하도록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이 거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세계소리축제 관계자에게 전화를 통해 확인했다.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 행정사무 감사가 예고되어 있으며, 그때 지금까지 언론 및 도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부족 · 소통 부재"

도의회 문안위, 행감서 '한목소리'

"홍보만 있고 내실은 없어"… 추진체계 총점검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4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하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위원들이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준비 부족과 소통이 부재하다고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하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IOC와의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조차 설명하지 않는 대응을 지적했다. "기밀이라며 의회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냐"고 우려를 표하며,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존중하되, 최소한 의회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올림픽 사전타당성 진행 현황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문체국과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핵심 절차인데, "10월 22일 의회에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일시 중지됐다'고 보고받았지만, 며칠 뒤 언론에서는 '11월 국회 제출'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정보 전달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 유치 추진은 도민의 예산과 행정역량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의회와의 정확한 정보 공유와 소통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국제스포츠 자문단 대부분이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 스포츠 자문단이라면 외국 스포츠계와 실질적 네트워크가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제 협력 기반이 없는 자문단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올림픽 유치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사업인 만큼, 해외 홍보·전문인재·국제 네트워크 등 현실적인 전략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다른 실·국의 올림픽 관련 해외출장 결과가 하계올림픽추진단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출장을 다녀온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야 해외출장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2036하계올림픽 추진이 실질적 준비 없이 홍보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9월 말 기준 올림픽유치단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라며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 올림픽 유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정상, 즉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PEC과 같은 국제행사도 국가가 전적으로 지휘했는데, 전주가 지역 단위로 이를 주도하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균형성장 3특 중심지'

김관영 지사, 민주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식서 주제발표

전북특별법 개정 · 고창 김치특화지구 등 특화 전략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전날(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3특'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과 전략을 강조하며, 실질적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3특'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지역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특례기반 지역을 의미하며, 전북은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전략을 통해 특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총 333개의 특례를 확보했고,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구를 이미 지정했다.

특히 고창에는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연중 공급 가능한 절임 배추 단지 조성과 기술이전 MOU 체결 등으로 지역 소득과 산업을 연계한 대표 사례를 만들고 있다.

전북은 현재 재정, 민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 법인세 감면과 같은 재정특례 입법화를 통해 5대 핵심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자치분권 균형성장' 외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이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과 부처 협의체계를 통해 특례 발굴과 제도화를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며, "전북자치도가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됨으로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회… 군정 전반 점검 등 나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17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실·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8일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이어진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개회일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 이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9면〉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 알 권리 무시한 기피시설 추진… 행정 독단"

혁신당 도당, 전북자치도에 사과 및 제도 개선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도당에 따르면, 도당 대변인단은 지난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주민 알 권리를 무시한 기피 시설 추진이 전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심각한 행정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논평에서 "지역 주민 삶과 직결되는 기피 시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은밀하게 추진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독단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주민들에게 깊은 불신과 소외감을 안겼다"며 전북도에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읍시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2,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SRF 발전소 등 전북 곳곳에서 불거진 사안들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도와 관계 기관에 주민 동의가 없는 기피 시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 문서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공론장을 마련할 것, 불투명한 추진으로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주민에게 사과할 것 등 세 가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도당은 "주민을 배제한 행정은 공공성과 정당성을 잃는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한 책임 인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외면한 행정은 설 자리가 없다"며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